
2009. 부분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인천광역시의료원 >

인 천 광 역 시
(감 사 관 실)

2009. 인천광역시의료원 部分監査 結果報告

- ❖ 감사기관 : 인천광역시의료원
- ❖ 감사기간 : 2009. 11. 9. ~ 11. 13. (5일간)
- ❖ 감사범위 : 2007. 7월부터 감사일까지
- ❖ 감 사 반 : 회계감사담당외 5명(감사자문관 참가)
- ❖ 중점감사사항
 - 예산편성 및 회계 집행의 적정성
 - 차상위계층 무료진료 등 공공의료 특화사업 적정 운영여부
 - 의료장비의 현대화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구입여부
 -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수립여부 등
- ❖ 지적사항 : 18건(시정 6건, 주의 9건, 개선 3건)

※ 주요 처분요구서 : 별첨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상 조치] 개선·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이행 부 적정

[현 황]

※ 의료원에 대한 각종 감사결과 주요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부당조치 사례

○ 경영합리화를 위해 민영화(위탁), 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 등의 방안 강구

- 비 의료분야(급식, 세탁 등) 아웃소싱,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2003년 감사원)
- ⇒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음(* 퇴직금누진제 폐지)

○ 의료원 경영개선 대책 마련(* 2005년 정부합동감사)

- 진료 성과급 제도 개선(개인별 목표량 설정 및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
- ⇒ 2007.6.22. 규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과반수 반대 부결, 현재까지 미 이행

○ 2007년 시 종합감사

- 경영수지 악화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미흡 ⇒ 조치 미흡
- 인사관리 부적정(인사규정 개정 등) ⇒ 미 이행
- 홍보업무 부실(홈페이지 제작 및 CI 사업 추진) ⇒ 조치 미흡(장기 지연)
-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조치 부적정(* 성과급 개선 등) ⇒ 미 이행

[확인내용]

- ▶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이나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각종 감사 결과 수차례에 걸쳐 경영수지 악화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중 요구하였음에도, 인천의료원에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¹⁾을 이유로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이 요구됩니다.

1)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코자 할 때 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경영 합리화 및 경영수지 개선 관련 [감사원, 정부합동, 시 종합]

- 2003년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의료원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민영화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 또는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 세탁실, 식당 등 비 의료 분야는 아웃 소싱을 통하여 경영 합리화를 꾀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세탁실 및 식당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한편,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비 의료시설에 대한 아웃 소싱을 계속 이행치 않고 있음
-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의료원 경영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면서, ‘진료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면서 진료 성과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고 있어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였고, 2009년 정부합동감사 전인 2009.01.12. 의료원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를 통하여 이를 적극 이행토록 촉구하였음에도,
 - 의료원에서는 2007.06.22. ‘진료 성과급 지급 규정’ 개정안을 규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성과급 지급 대상자(과장급 10인)들의 과반수이상이 부 동의 함으로써 개정안이 부결되었으며, 이후에는 답보 상태에 있음.
- 2007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누적 결손금의 증가, 직원 급여 미지급액 발생, 의약품 지급채무 확대, 퇴직예치금의 감소 및 지역개발기금 79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이 2010년부터 시작되는 등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 출연·출자금까지 고려할 경우 지출과 수익이 비슷한 수준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로 퇴직자 발생 등 추가비용 발생시 자금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출연·출자금의 증액 요청,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으로서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경영수지 악화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시 종합]

- 2007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직원 임용사항 기록·관리 소홀, 자체 감사기능과 복무관리 업무의 부재, 직원 채용시 대부분 특채, 인사위원회에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등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는바,
 - 인사기록을 철저히 하고,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1/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토록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 의료원의 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토록 되어 있어 개선되

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아니함.

3. 의료원 홍보에 관한 사항 [시 종합]

- 2007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의료원 홍보종합계획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직제 규정상 업무분장도 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는 1999년 개설한 후 2002년 무상으로 재편한 이래 콘텐츠 보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내외 홍보 전략의 부재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SWOT’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HI(Hospital Identity) 사업의 조속 시행 등 홍보업무에 주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 홈페이지 개편 용역(용역비 3,000만원)은 수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시켰고, 더욱이 현재까지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로 보류 상태에 있으며, HI 용역사업(* 용역예산 7,000만원)도 예산만 확보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일괄 추진하기로 방침만 정하여 놓은 채로 계약조차 하지 않고 담보 상태에 있어 또 다시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처 분 요 구]

1. 의료원의 경영 합리화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랍니다. ⇒ [개선]
2. 특히 ‘의료원의 특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비의료분야 아웃소싱’, ‘진료성과급제 개선’, ‘불공정 단체협약 개정 및 불합리한 내규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선 의지를 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3. 아울러 ‘홈페이지 개편’ 용역사업은 하루속히 준공처리하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되, 용역에 대한 기성금은 즉시 지급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HI’ 사업은 홍보 마케팅 전략과 연계, 속히 추진하식 바랍니다. ⇒ [시정]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기획홍보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을 부적정 책정

[현 황]

○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표

월 소정시간이 184시간	월 소정시간이 209시간	비고
23일 × 8일 =184시간	48시간/6(365일-52일)/12=208.66시간 ≒209시간	

○ 예산편성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출기초

월 소정근로시간이 184시간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일 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1.5/184× 시간외근무시간	통상임금× 1.5/184× 휴일근무시간	통상임금× 0.5/184× 야간근무시간	통상임금× 1.5/209× 시간외근무시간	통상임금× 1.5/209× 휴일근무시간	통상임금× 0.5/209× 야간근무시간

○ 시간외 수당 등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연 도 별	실제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과다지급내역			
	소계	시간외	휴일	야간	소계	시간외	휴일	야간	소계	시간외	휴일	야간
계	2,989,546	1,799,362	333,949	856,235	2,632,992	1,585,173	294,004	753,815	356,499	214,189	39,945	102,420
07	882,994	507,355	113,947	261,692	778,418	447,712	100,318	230,388	104,576	59,643	13,629	31,304
08	1,037,376	630,994	114,929	291,453	913,289	555,517	101,181	256,591	124,087	75,477	13,748	34,862
09	1,069,176	661,013	105,073	303,090	941,285	581,944	92,505	266,836	127,891	79,069	12,568	36,254

[위법부당내용]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월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 1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2007년도부터 위 현황의 수당을 편성 및 지급함에 있어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월 유급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산입하지 않은 184시간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산정함으로써 결국 위 현황과 같이 3년간 총 356,499천원의 각종 수당을 과다하게 편성 및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보수규정」 제28조(시간외 근무수당 등) 별표 7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 \times 1.50/184 \times 시간),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times 1.50/184 \times 시간), 야간근무수당(통상임금 \times 0.5/184 \times 시간)의 지급 율과 지급액을 이와 같이 부적합하게 규정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맞게 지급율 등 지급기준을 적정히 책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기획홍보팀·총무팀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출예산편성 부적정 및 직원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현 황]

○ 인센티브관련 세출예산편성현황

세출예산과목	산출내역	비고
항)임상연구사업비 세항)임상연구사업비 목)임상연구사업비	임상연구사업(논문게재, 방송출현, 언론 및 소식지 등 칼럼기고, 지역주민 건강강연회 강사 참석) 25,000,000원	
항)관리운영비 세항)이전경비 목)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종식비) : 5,000원×17명×255일 = 21,675,000원 (교통비) : 4,000원×17명×255일 = 17,340,000원 병원소식지 원고료 : 300,000원×4회 = 1,200,000원	
포상금	친절직원 포상 : 1,500,000원×5회 = 7,500,000원 QI경진대회 포상 : 2,000,000원×4회 = 1,200,000원	
제안시상	병원제도 개선상 (일반제안) : 1,000,000원×2회 = 2,000,000원	

[위법부당내용]

1) 예산편성지침 부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7589호, 2005.7.13.,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2005. 9. 13일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서 관장하던 의료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관장이후인 2006년도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나 시(보건정책과)에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지침시달의 내용이 없어 현재 의료원에서는 지방공기업 세출예산편성 지침을 중심으로 자체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임상연구사업비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의료원의 질 향상과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및 관련 학문의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원의 대외적인 홍보 효과 등을 위하여 2007년부터 ‘임상연구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은 의료원 재직 1년 이상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임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0,000원에서 3,000,0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2/4분기 까지 총 89건 31,7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논문게재 및 발표 1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내공개강좌, 칼럼기고(굿모닝인천, 일간건설신문 등), 방송출연 등으로 학문의 연구발전 부분은 미미하고 대부분 의료원의 대외적인 홍보에 대한 보상차원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별도의 항목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비내에 그와 유사한 목인 포상금이나 보상금 목에 편입시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현재의 임상연구사업비라는 용어도 그에 맞게 적절한 용어로 대체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2009년부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고부담이 공공단체(의료원 해당)는 제외됨에 따라 의료원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봉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를 봉급은 인건비에, 교통비와 중식비는 보상금에, 피복비는 피복비에 각각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교통비와 중식비는 보상금보다는 인건비목에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연구사업비의 예산편성 시 학문적 분야와 대외홍보 분야를 분리하여 산출내역 및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직원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현재 의료원은 만성 적자이며 특히 2009년도에는 장례식장의 수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무려 20%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인근에 개인 장례식장 개업)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영개선 대비책을 세워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수익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 대책(의료원 전체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수립 필요)없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개선의 여러 방안 중 현재 의료원 직원에 대한 근무 동기부여도 그중에 하나일 것이며, 동기부여를 위한 방편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제안제도, 예산절감, 영업수익 창출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포상(현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의료원의 내실 있는 경영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연구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인천의료원을 빛낸 모든 학문적 분야와 의료원의 대외홍보 및 영업창출 등에 대한 경영수익 개선분야를 분리하여 직원이면 누구나(의료직, 일반직 모두 포함)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포상금 중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은 의료원 사정(매월 1회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 1인, 간호사 2인, 직원 1인 선별 시상)에 맞게 선별하여 현금 포상 등을 지급함으로써 환자나 환자보호자들에게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직원들에게는 일하는 동기부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 분 요 구]

1. 자체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임상연구사업비는 학문적 분야와 홍보분야로 나눈 후, 그 명칭을 달리하여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날로 악화되는 의료원의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의료직과 일반직직)들이 경영개선을 위한 영업수익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차별없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 누구에게나 경영수익을 위한 제안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공사 추진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계 약 업 체	설계내역 현황
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공사	'08.12.30 ~ ' 09.3.14	957,000	(주)00000	건축(401,132), 기계설비(255,688), 전기(67,684), 통신(48,194), 소방(8,970)

[위법부당내용]

가. 업체선정 계약방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당사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명계약에 의한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와 수의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지명경쟁계약의 대상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이며, 지명기준은 지명경쟁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공사의 경우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지명하고,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 지명경쟁참가 적격자에게는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승낙서를 받아 참가여부를 확인하고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대상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수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의료원에서는 2007년 10월 질병본부로부터 국비 100%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 확충공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지연되어 ‘08년 12월 16일에서야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08년 12월 16일 ★★★EM 등 4개 업체를 지명하여 현장 설명을 하고 ‘08. 12. 23일 가격제안을 받아 ‘08.12.30 (주)00000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지명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자격조건을 보면 “종합병원 350병상 이상 또는 격리시설(BSL 3급 시설 포함) 330㎡ 이상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한 사항은 지명경쟁계약의 조건인 적격 대상 업체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여 10인 이내의 업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명대상을 5인 이상으로 지명하였어야 하나 처음부터 조사업체를 4인으로 지명하여 부적정하게 계약방법 및 지명업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나. 부적정한 통합발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는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4호는 제11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야 하고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 할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 확충공사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는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분리발주 하였어야 하나 의료원에서는 이를 통합 발주하였으며, 계약업체인 (주)00000는 전기와 통신에 대한 별도의 자격도 없는 업체였으며, 계약체결 후 계약업체는 전기와 통신 관련 공사를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인 ----(주)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방법의 선정 및 계약업무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2.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반드시 분리발주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감액 12,457,94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부적정

[현 황]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정산 현황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업 체 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 고
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 확충공사	‘08.12.30 ~ ‘09.4.10	962,830,000	(주)00000	3,880,147	-	준공
격리병상 크린룸 시설공사	‘09.4.10 ~ ‘09.5.11	193,600,000	(주)00000	1,097,658	-	준공
격리병실(6629호) 환경개선공사	‘09.4.10 ~ ‘09.5.11	22,990,000	(주)00000	98,606	-	준공
외부환경개선공사	‘08.12.19 ~ ‘09.11.30	1,044,000,000	00건업	5,973,631	3,662,843	공사중(기성금 76.6% 지급)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VIII.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사후정산 등에 의하면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절차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이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호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08.2.4)의 적용시기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원에서는 “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확충” 등 3개 공사와 관련 준공금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5,076,41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76.6%의 기성금을 지급한 “외부 환경공사”에 대해서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서의 총 9,637,470원 중 기성금 지급액 대비 약 7,381,530원을 정산 없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공사 준공 후 정산하지 아니한 국민연금 5,076,410원에 대하여는 정산을 실시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국민연금 등에 대하여 기성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진행중인 공사의 7,381,520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감액 처리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회수 100,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접대성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현 황]

○ 접대성경비 집행 현황

(단위:원)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내용	비 고
2007.11.14	100,000	0000 아·취임식	
2007.11.26	100,000	“	
2008.07.10	458,000	개원76주년 기념음악회	
	237,000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5조(지출증빙에관한서류)에 의하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의료원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개원76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만찬을 실시하면서 만찬에 필요한 금액을 1회에 집행하여 위 규정대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동일자 동일장소에서 2회(1차:2008.07.10 22:03 458,000원, 2차:2008.07.10 22:40 237,000원)에 걸쳐 695,000원을 나누어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 0000 이·취임식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건으로 한 번만 집행해야 할 것을 두 번 집행 하는 등 접대성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의료원에서는 향후에 접대성 경비로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집행토록 하시고,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 지출된 100천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회계규정 제7장 계약규정에 관한 사항

[현 황]

○ 규정명 : 인천광역시의료원 회계규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은 '05. 8. 5제정하여 '06.1.1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여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의료원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의 각종 회계예규에 의거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계규정」 제7장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정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그 내용을 규정에 포함하였고, 2005년 4월 11일 일부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지방계약법의 제정과 더불어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회계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 「회계규정」 제7장 계약의 내용은 현실과 부합하지도 아니하고, 지방계약법의 제정 및 수시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서 회계규정 운영상 문제점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사업을 보면 2007년 이전에는 규모가 큰 공사 등의 사업이 없고 소액계약인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의 적용상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나, 2007년 국가지원사업인 격리병동 음압

유지 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사업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적용에 있어 혼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료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사·공단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의 출자·출연에 의해 설립된 인천광역시지방의료원으로서 그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보조금관련 법률 및 조례, 지방계약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 당연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회계규정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회계규정」 제7장 계약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른 자체 회계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였고, 지방계약법과 상이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 적용에 있어 한계와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회계규정 제7장 계약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하는 등의 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의 각종 회계예규를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선비 계정 지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수선비 계정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그 기술적 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형자산의 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천의료원 「회계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건물 또는 벽의 도장,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교체,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과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등을 수익적 지출로 하고,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등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의료원에서는 자본적 지출인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흡연실 CCTV 카메라 등 총 9건 계 11,601,600원의 비품을 구입하면서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 계정에서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8년 상반기 2건, 2008년 하반기 5건, 2009년 상반기 1건의 신규 취득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제 경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건축물 증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구조검토용역 등 총 5건 계 23,750,000원의 용역비를 수선비 계정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의료원에서는 수선비 계정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하시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향후 계정과목을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계약직 채용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계약직 직원과 관련한 인사 규정 부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22조의2(직원의 계약제 운영) ①의료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에 맞는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채용한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 될 때에는 제15조의 조건부 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계약제 의사의 경우 진료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채용기간, 직원 복무 및 보수 규정 등 채용조건이나 임용절차 등을 반드시 명문화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도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이러한 채용조건이나 임용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직공무원규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위 「인사규정」 제22조의2(직원의 계약제 운영) 이외에는 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그 어떤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임의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만 9명(2008년도 1명 포함)의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채용계획 및 공고의 부적정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계획공고상에 정규직 [의료원의 경우, 의료직(의사, 약사, 간호사)과 일반직(사무직, 기술직, 보건직, 기능직)] 인지 계약직인지, 계약직이면 몇 급 상당인지 등을 명시하여 응시에정자들이 본인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공고상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기재도 없이 공고를 하고 있으며, 채용예정인원의 경우에도 팀장은 분명 1명임에도 예정인원란에 “○”로 표시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을 보면 똑같은 직위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위 현황과 같이 응시자격을 그때그때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등 채용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에서는 2007년 5월부터 총 38차례에 걸쳐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재공고 포함)를 하면서 현재 의료원의 절대 부족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의 채용 공고시에는 자체 홈페이지와 함께 관련 사이트 또는 의학 관련 신문 등에 함께 공고를 함으로서 부족한 인력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으나, 그 밖의 사무직, 기술직, 계약직 등에 관한 채용공고는 오직 자체 홈페이지에 임의로 기간을 정하여 게재(홈페이지내의 채용공고가 남아 있지 않음)함으로서 응시인원이 매우 적어(통상 모집인원대비 1:1 수준) 효율적인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1)에서 언급한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채용공고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들이 없어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인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의료원 「보수규정시행내규」는 계약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동일 직급의 기본급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은 연봉제가 아닌 의료원 규정에서 정한 보수체계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원 「연봉제시행규정」 제4조에서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3급이상 직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 37명(의사 27명 포함)은 의료원 「보수규정시행내규」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 채용한 계약직 직원 37명(의사 27명, 시설추진단 4명, 임

상심리전문가 1명, 임상병리사 2명, 조무사 1명, 운전원 1명, 기획홍보팀장 1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보면 임상병리사를 제외한 35명 전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의사의 경우, 「연봉제시행규정」 제4조에는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에는 의사와 3급 이상 직원의 연봉계약은 의료원장과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어 연봉적용대상이 불분명함으로 연봉제의 적용대상(규정 제4조)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함.

[처 분 요 구]

1.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도록 임용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계약직에 대한 채용 근거와 보수운영 규정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비하시고, 또한 계약직을 포함한 신규, 경력직 등의 채용과 관련한 임용의 전반적인 절차인 채용계획수립부터 공고, 시험, 합격여부 결정 등 전반적인 임용부분에 대하여 현 「인사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즉시 개정 또는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고과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인사고과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는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따위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말하며, 그 중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직원의 승진(승급)과 직결된 문제로 직장인이란 누구나 이러한 승진 등의 근거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는 근무성적, 경력, 연수성적, 가점(이하 “인사고과”라 한다)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의 기초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련의 절차 등을 「인사고과규정」에 담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고과 사항은 직원의 인사사항(승진, 특별승급 등)이 발생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는 결정적인 자료로서 특히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총 60점 만점에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하는 것으로, 통상 평정자나 확인자가 직원들에 대한 성적을 평정하고자 할 경우 그 평정기간이 너무 짧으면 본연의 업무수행 등에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직원들에 대한 평정기간의 폭이 넓어 확인의 어려움 등이 있어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사고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평정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0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2006. 1. 1. ~ 2007. 6. 30.까지의 18개월간의 근무성적을 2008. 3. 24.에야 비로소 평정하였고, 2007.

7. 1.이후는 감사일 현재까지 28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을 평정 하지 않는 등 평정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인사고과 운영을 의심케 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근무평정의 부적정

위 표와 같이 부속한의원과 백령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원 「인사고과규정」 제4조(평정자와 확인자)에서 평정자와 확인자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진료부의 5급이하의 경우에는 진료부원장의 확인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확인자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3) 계약직의 근무성적평가 부재

인천광역시의료원에는 총 37명의 계약직 직원(의사 2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22조의2에 따르면, 의료원에는 직종에 맞는 자를 계약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 채용한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 될 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이들 계약직에 대한 근무성적을 정규직과는 별도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을 제·개정하여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규정도 없고 근무성적 우수자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도 없이 감사기간 중 계약직을 총 4회 9명을 기능 또는 상용직으로 정규직화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현행 근무성적 평정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하여 근무성적을 28개월이상 평정하지 않고 방치한 인사담당자는 귀 원 규정에 따라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평정에 대한 시기 등이 불규칙적이므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인사고과규정」에 근무성적 평정 시기(기간)를 추가하시기 바라며, 백령병원 및 부속한의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또한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근무성적은 정규직과는 별도로 계약직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추후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을 제·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약사직 단일호봉제 전환에 관한 사항

[현 황]

○ 의료원 약사 및 간호직 정·현원

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약사	정원	6		1	1	1	1	2			의사의 경우 단일호봉제
	현원	1		1							
간호사	정원	142		2	10	29	49	46	16		
	현원	124		1	6	25	44	12	36		

[위법부당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5)을 정하면서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만큼의 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 외에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 수 160건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1985. 7. 1.자로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직제규정상 의사, 약사, 간호사에 대한 정원을 단일호봉제로 운영하다가 IMF시절에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동일조직 내에 보수체제 일원화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호봉 승급액의 균형을 조정하여 인건비 상승요인을 제거하여 제정운영 부담요인을 최소화하자는 명분아래 1999. 4. 15.자로 약사와 간호사에 대한 단일호봉제를 직급제로 전환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제로 전환되면서 약사에 대한 보수가 사회통념상의 보수보다 현저히 낮은 관계로 채용이 극히 어려워 위 현황과 같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약사의 정원은 위 현황과 같이 현재 6명이며, 현원은 1명으로 이에 대한 정원충족을 위하여 의료원에서는 약사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의료원 홈페이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협조문서, 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국시당일 홍보, 약사관련 신문매체인 약업신문사와 약사공론,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팜 등에 정원에 충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약사 채용 공고를 내보내고 있지만 현재 까지도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2009년도 1일 조제건수는 640건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7명의 약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1명만을 채용·운영하고 있는 실정(간호사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241.5명, 외래환자 675.7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의료원의 간호사는 15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의료원에서는 이에 대한 극단의 대비책 등을 강구·노력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시 종합감사에서도 경영개선의 차원에서 의료진의 정원 배치 등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시급함을 요구하는 처분도 한바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방안 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원에서는 약사 충원을 위하여 의료원 홈페이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협조문서, 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국시당일 홍보, 약사관련 신문매체인 약업신문사와 약사공론,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팜 등에 정원에 충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약사 채용 공고를 내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에 있어서 상호 필수부가결한 관계로 의료원의 입장에서 보면 약사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절대인력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에서는 약사에 대한 채용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형식적인 채용공고의 반복으로는 약사 충원은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현재 시중 약국 또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수준으로 보수, 복지 등 약사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약사들의 직급제를 1999년 이전의 단일호봉제(현재 의사의 경우

에는 단일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음) 등으로 다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 분 요 구]

1. 의료원에서는 현재 유능한 의료직(의사, 약사, 간호사)의 총원이 시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약사의 경우 필요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보수를 현행 직급제에서 단일호봉제로 전환 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서 향후 의료원의 경영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직 총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77,715,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천의료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거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이고, “전문공사업은”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이라고 각각 규정함으로써 업종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는 일반적으로 종합공사업자는 전문공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전문공사업자는 종합공사업자만이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예외의 경우 중 2종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1인의 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공사비는 2억원 미만으로 한정

또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경우는 수급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공정을 및 수행공사 금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내용, 공정상

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과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게 하여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접수된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업무 담당자는 공사시방서, 수량산출내역, 도면 등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진행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초 설계도서와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008. 12. 29)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사업 추진은 설계용역 완료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발주 하여야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건축법제21조규정에 의거 공사착수 전에 반드시 해당 구청(동구청)에 착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설업자 선정 부적정

○ 공사개요

- 7층 식당 증축공사(58㎡), 기존7층 리모델링(휴게공간→식당)
- 외부창호 리모델링공사, 소회의실 인테리어공사(지하1층)
- ELEV HOUSING공사, 주출입구 및 주차관제 캐노피공사

인천의료원은 2008. 12. 22일 외부환경 개선공사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하며, 5개 전문건설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통지하였고, 2008. 12. 23일 현장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 12. 29일 공사개찰 결과 입찰참여 업체수는 2개사로 입찰대상 5개사 중 3개사가 입찰 포기를 하였습니다.

업체별 포기사유를 보면 (주)----는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전문시공업체로 당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사범위 및 견적 산출이 불가능한 공정이 포함되어 공사에 대한 견적산출이 불가능하여 포기하였고,

(주)0000은 전문공정이 아닌 관계로 견적 및 공사수행이 불가하여 포기하였으며,

(주)****은 현장설명회 결과 당사가 본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동 공사는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거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자가 시공자로 선정되어 추진하였어야 하나 부당하게 전문공사업자가 도급받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2. 공정관리 소홀

인천의료원 측은 외부환경개선공사를 2009. 4. 1. 준공예정으로 2009. 1. 2. 착공하였으나 2009. 3. 5. 공정율이 47%로 준공 잔여일이 27일정도 남은 상황에서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공정관리를 지시치 않았으며, 2009. 4. 1. 1차 공기연장(60일), 2009. 6. 1. 2차 공기연장(60일), 2009. 7. 29. 3차 공기연장(94일), 2009. 10. 30. 4차 공기연장(30일)등 4회의 공기연장을 추진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공사기간 내 서면으로는 한차례도 지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연장 하였으며 연장시 수정공정표도 첨부(작성)치 않았고, 연장조치하여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공정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설계변경 감액 조치 소홀

(단 위 : 천원)

구 분	품 명	수 량	순공사비	원가계산액	지적사항	비고
7층증축및외부 창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1식	8,353	68,951	미 감액	
	방수공사	1식	2,384			
	미장공사	1식	600			
	유리/창호공사	1식	11,006			
	구조물및판넬공사	1식	13,268			
	증축에대한 인허가비	1식	10,000			
	복층유리(예산낭비)	1식	37,600	48,330	재사용조치	생산
폐기물처리 미장공사	유리 폐기물	1식	6,450	8,764	미 감액	
	7층식당폐기물	1식	301			
	소회의실폐기물	1식	166			
합 계		77,715천원				감액

기존 창호유리 교체부분에 대하여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반영(150㎡)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재활용 조치한 사실을 모르고 감액처리치 않았으며,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시 기존건축물 철거로 발생하는 알루미늄(1,694kg), 고철(198kg)을 감액 대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증액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였고, 공사진행과정에서 7층 증축공사가 사업 중복으로 취소되어 2009. 8월 1차 설계변경시 전체 감액하여야 하나 일부물량(창호, 방수, 콘크리트, 미장공사 등) 및 증축인허가 비용을 미 감액 조치하였고, 뿐만 아니라 2009. 3. 26일 7층 지붕 창호 물량이 제작 완료되었으나 일부만 시공하고 미 사용되는 창호 잔여물량 48,330천원 상당이 현재 현장에 반입되지 못하고 시공사 공장 부지에 보관되어 있어 예산을 손실하는 등 총 77,715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 설계변경(실정보고 승인)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4.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

2009. 1. 2 공사 착수 후 2009. 6. 10일 미관심의 완료, 2009. 7. 20 건축허가 완료 등 공사발주 전에 완료되어야 할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따른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 및 지연되었으며, 공정율 90%인 현재까지 잔여 행정절차(건축신고)를 이행치 않고 부당하게 공사를 추진하였음.

※ 착수신고 미이행시 건축법제111조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 분 요 구]

1. 향후 공사발주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영업 범위를 숙지하여 발주하시기 바라며,
2.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서면으로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공사기간 내 이행하시고, 계약기간 연장시에는 필히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변경시 과다계산, 폐기물 미감액 비용 및 증축(7층) 취소 관련 미정산된 77,715천원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감액 조치하시고, 7층 증축공사 취소로 동 공사에 미 사용되는 창호자재 48,330천원에 대하여는 인천 의료원 추가 공사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4.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동구청에 즉시 신고하시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기술자 배치 소홀(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위법부당내용]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 당시 첨부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8, 2008.12.29) 제14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공사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이거나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규모에 적합한 품질관리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에서는 공사비 10억원의 외부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규정에 의거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해당직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2009. 1. 2.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사(00건업)가 제출한 현장대리인 ---는 동 조건에 부적합한자로 해당 공사를 10개월이나 추진하였음.

품질관리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공사인 경우 2억이상인 경우 배치토록 되어 있으며, 현장대리인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 12. 30일 착수한 인천의료원 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확충공사[공사비:957,000천원, 도급자: (주) 00000]의 경우 품질관리자를 미선임하였고, 2009. 1. 2일 착수한 인천의료원 외부환경 개선공사[공사비:1,090,000천원, 도급자: 00건업]의 경우도 품질관리자를 미선임하였으며, 인천의료원 외장공사[공사비: 933,000천원, 도급자: (주)*****]의 경우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를 겸직하였으며, 인천의료원 응급실 및 ONE-STOP 지원센터 신축공사의 경우도[공사비: 337,000천원, 도급자: (주)☆☆] 품질관리자를 미선임하는 등 건설공사의 기술자 배치·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규정에 의거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절한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착공계 접수시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미 실시

[위법부당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인천의료원 시설사업추진단에서 시행하는 “외부환경 개선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준공까지 공사잔여 일정이 16일 남은 상황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전문기관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에 행정지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자산관리대장 미비치 및 기증품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자산관리대장 미비치

○ 인천의료원 「회계규정」 제133조에 의하면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하며,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원장 또는 그 위임자는 고정자산 총괄대장과 각 개별대장 및 그 부속도면 등의 장부를 비치하여 항상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때에는 고정자산 개별대장에 신규 등재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4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사하여 현물과 장부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천의료원에서는 고정자산 총괄대장을 비롯한 각 개별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물과 장부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고정자산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기증품 관리 소홀

○ 「고정자산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으로 조성 또는 구입되거나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원의 소유로 된 자산을 말하며, 「재고자산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자산관리담당은 물품의 기증신

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는 당해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자산출납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천의료원에서는 기증받은 물품이 있을 경우 기증품조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취득하고 고정자산으로 등록, 관리하였어야 하나, 물리치료실에 설치·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및 에어컨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함에 따라 감사일 현재까지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며, 1997년 시에서 기증받은 셔틀버스는 2008년 불용결정할 때까지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이 사회의 의결 및 시장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의료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확한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증품 취득 관리시 행정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자산의 불용결정 및 처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불용결정 및 처분절차 부적정

○ 「고정자산관리규정」 제29조 및 제31조에 의하면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고정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단, 1,000만 원 이상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용결정한 고정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도 고정자산 대장사본, 평가가격과 평정조서, 매각사유서 등을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의료원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정자산 불용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없이 불용결정된 고정자산을 매각,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불용결정시 의료장비관리위원회 미활용

○ 「의료장비관리위원회규칙」 제1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의료장비관리위원회는 의료장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병원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장비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의료원에서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불용결정함에 있어 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심의서를 첨부, 불용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내구년수 이외에 자체기술점검자 1인의 소견서만을 첨부함에 따라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이사회에서 불용결정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불용자산 매각 지연

○ 불용자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인천의료원에서는 2008. 3.2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불용결정된 전산장비 등에 대하여 2008. 5.16일 매각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약4개월이 지난 2008. 9.18일에서야 매각 공고를 하고 입찰하였으며, 2008.10.15일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바로 재공고 입찰을 통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약4개월이 지난 2009. 2.10일에서야 입찰당시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자산을 불용결정 및 처분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준수하시고 불필요한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자산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라며,

2. 의료장비를 불용결정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불용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